

연구총서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 춘 흠

통일연구원

# 요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연구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와 대 북한 및 한국 전략과 정책을 서술하여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있어 대두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동북아 국제관계 역학 요인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제시하여 향후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는 데 있다.

## I.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와 정책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는 다음과 같은 중요도 순으로 분석된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영향력과 통제력 상실이 방지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주변 강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개입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억제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남북한 당국이 평화공존을 추구하여야 하며 남북한간 경협과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한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상기의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를 바탕으로 중국은 북한이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유지, 존속됨으로써 주변 강국들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되지 않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정치적 유대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개입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국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선에서 양국간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대북 물자지원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1999년 8월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간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논의를 개시하였다. 중국의 평화공존 외교노선 추구 표명으로 중국은 향후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과는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II. 한반도 평화과정: 중국의 입장과 역할 전망

북한의 핵투명성과 미사일 개발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역시 중국의 군사, 안보태세에 직접적이고도 새로운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을 지지하는 데 다른 핵보유국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미·북간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과거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IAEA나 유엔 차원에서의 무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의 TMD 구축이 가시화되고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가능성이 거둬 표명되자, 중국은 대북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고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는 입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지 표명함으로써 미·북 베를린 미사일 협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가 중단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정전협정 유지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 자국 군사 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음에도 북한의 대미 제안에 대해 북한과는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對美 접근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대하고 한국의 기존 입장인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구소련 붕괴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안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주한미군이 자신을 대적하리라는 예상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만 현상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과 미국 관계개선문제에 대해, 중국은 북·미 관계개선은 지지하나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는 환영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급속한 미·북 관계개선으로 기존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자국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는 급속한 미·북 관계개선에 앞서 1999년 대북 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북 관계 개선의 속도와 정도가 과거의 중·한 관계 개선의 속도와 비슷하기를 원할 것이다.

남북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4자회담 4차 본회담 분과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5대 협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관련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긴장이 완화될 것을 주장하

였다. 특히 중국은 현재 남북한의 불신과 적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남북간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남북한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공동으로 협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과 정치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역할 전망에 대해 중국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동북아 안보전략의 역동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역할의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으로는 중요도 순으로 중국의 주변 강국과의 관계 변화, 특히 중·미·일 역학관계상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위상, 중국의 미·북 관계 평가, 남북한 관계, 한국과 중국 관계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은 미·일·중 관계에 있어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지지할 것이며, 일본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아 이를 반대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미관계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때 중국은 한반도 체제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강도는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때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중·미 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정당한 위상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미·일 신안보체제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대만해협 상에서의 역할확대를 묵인하고 있어 양국간 진정한 신뢰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요구와는

달리 대만통일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국 간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 국면이 크게 조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북관계에 대해 중국은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미국의 개입은 환영하나 중국의 이익을 배제한 급속한 미·북 관계 개선은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金正日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점으로, 한국 및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최근의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한 데 있다.

남북한 관계와 관련, 중국은 한·미 양국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국간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정책이 남북간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안에 서로 합의한 경우, 이를 가장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어느 일방이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한반도 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를 가장 부정적이며 자기 주장적(assertive)으로 반대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중국은 자신이 반대하는 미국 주도의 TMD계획에 한국이 불참을 표명한 것은 한·중 양국이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선린우호' 관계에서 1998년 양국이 제창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는 안보협력 차원의 좋은 사례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한·중간의 안보협력의 확대와 공동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일 안보 체제하에 있어 진정한 안보 독립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Ⅲ. 한반도 평화과정: 대중 협력 유도 방안

#### 1. 기본 전략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이행 여부,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입장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첫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법적인 전환보다는 사실적, 현실적 전환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일괄적인 제안보다는 단계적으로 해결 가능한 제안을 중시한다. 다시 말하면, 현상유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평화체제 구축안을 제시한다. 셋째, 남북한 군축 합의보다는 정치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 넷째, 한국의 통일후 입장은 가급적 언급을 회피한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보다는 대중 안보협력 확대에 더욱 치중한다. 여섯째, 미국이 가교 역할을 하지 않는 제안이나 혹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한다. 일곱째, 한·중 고위급 안보협의회를 창설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 2. 사안별 정책 제안

### 가. 한·미 양국의 대중 관계 강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미간 갈등 사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단독으로 지지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대미 외교 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

### 나. 4자회담: 중국과의 사전 협의

중국과 사전에 단독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다자적 협의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6자회담 거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건 합의에 대한 4자합의를 끌어내기 보다는 남북간 협의할 안건은 남북한이 먼저한 후 미국과 중국에 동의를 구하고, 미·북간 합의한 사안은 미·북 합의 후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사안별 당사자 원칙을 운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의 대중 및 대미,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의혹 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중국과 협의시 기한 설정 필요

한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은 북한의 수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권고를 심분 활용하여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대북 및

대중 기한 설정은 미국의 대중 협상시 효력을 발생한 것과 같이 한·미·일 삼국에게 결국은 이득이 되는 외교적 성과라 할 것이다.

#### 라. 미·북 관계 개선 지지

미·북 관계 개선으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갖는 비중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미·북 관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중 안보관계 확대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평화과정에 대한 협상에 적극 임할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미·북 관계 수립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안을 명기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한·미 양국이 이행한다는 문안을 명기한다.

#### 마. 정전위 위상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필요

북한의 정전위 기능 훼손 기도로 정전위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 철수에 따른 중국측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DMZ에 배치되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을 50-100km뒤로 후퇴하고 쌍방간에 군사력 배치 한계지역(Limited Deployment Zone, LDZ)의 설정을 북한에 제안하고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의 감시를 요청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지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 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중국이 미·북간 평화협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한다. 중국의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점을 활용한다. 중국은 다자간 또는 국제

적 보장을 받는 평화체제 구축안은 중국의 기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평화협정에 의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안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 IV. 결 론

중국은 미국의 전략이 대중 패권확보에 있음을 경계하고 있어 미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바탕 하에서 한반도 평화가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대북 경제지원과 대남 안보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현상유지를 통한 점진적인 정치적 타협과 남북한 상호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나,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대북 군사동맹 강화는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4자회담에서의 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찬성함으로써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로 4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 정치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간 군비축소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 목 차 -

I. 서 론 .....	1
II.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와 정책 .....	3
1.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 .....	3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	6
3. 중국의 대한국 정책 .....	11
III. 한반도 평화과정: 중국의 입장과 역할 전망 .....	14
1. 중국의 입장 .....	15
2. 중국의 역할 전망 .....	36
IV. 한반도 평화과정: 대중 협력 유도 방안 .....	51
1. 기본 전략 .....	51
2. 사안별 정책 제안 .....	51
V. 결 론 .....	56
참고문헌 .....	58

## I. 서론

최근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5월 5일 CNN 회견에서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5개 항목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대남 전쟁기도를 포기하고 남북공존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목표가 원만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크게 관여하여 왔으며, 특히 북한핵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제네바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등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4자회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것임을 선포한 점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평화구축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표명한 한반도 평화과정(peace process)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한국 및 미국과는 사뭇 다른 견해를 표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과정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 전망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대중 협력 유도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와 대북한 및 한국 전략과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있어 대두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동북아 국

## 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제관계 역학 요인 분석을 통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제시하여 향후 중국의 역할을 전망하고자 한다.

## II.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와 정책

### 1. 중국의 한반도 전략 기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안보전략 목표는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 연장선 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군사 및 경제 안보상에 아주 중요한 전략적 및 지정학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전략 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sup>1)</sup> 중국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축으로 하는 삼각구도 속에서 자국의 안보전략 기조인 반패권주의와 평화공존5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이 형성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이다.

첫째, 중국은 1997년 9월 개최된 15차 당대회에서 강택민 총서기를 중심으로한 일인체제가 확립되어 중국의 정치적 안정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소보 사태이후 나타난 미국주도의 신국제주의를 경계하면서<sup>2)</sup> 자국의 경제발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sup> 이는 중국이 현 국제정세는 냉전적 사고의 상존, 초강대국의 패권주의와 강권

1)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기본 방향을 한반도 정세의 안정유지,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제고 및 남한과의 경제협력 강화로 보는 견해도 있다. 황병무,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주변 4각의 대외 전략기조와 한반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6. 11), p. 144.

2) 沈國放 유엔주재 중국부대표는 제54차 유엔총회 제1차회의에서 미국주도의 TMD계획과 ABM 조약이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어 군비통제와 군비축소에 대한 국제적 노력이 증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언급하고 냉전적 사고는 상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패권주의 강권주의인 신국가주의가 대두되고 있어 세계는 더욱 불안정하다고 언급하였다. "Shen Guofang on Building New Security Concept," *FBIS-CHI-1999-1014*.

3) 중국은 「政治報告」를 통해 등소평이 제창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이론을 행동지침으로 표방하고 특히 경제개혁의 비약적 발전, 정치개혁의 추진, 정신문명 건설의 강화를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人民日報」, 1997. 9. 18. ~ 9. 20.



정치, 일부 국가들의 군사집단 확대 및 동맹 강화 움직임, 신간섭주의 등이 기존의 안정세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평화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안정된 주변환경이 요구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다가오는 21세기초에도 미국에 직접 무력으로 맞서는 군사행동은 자제하고 동북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에서이다.

둘째,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내정간섭에 관련된 사안이 아닌 한, 미국의 요구와 행위를 가능한 한 수용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는 중국이 냉전시대 구소련이 미국과의 대결을 위주로 한 전략 추구로 결국 패배하였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 동북아질서 형성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미 관계개선 및 유엔에서의 거부권 행사나 다자적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기존에 자국이 향유하여 온 핵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억제한다는 데 있다.<sup>4)</sup>

상기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의 한반도 전략기조는 다음과 같은 중요도 순으로 분석된다.

첫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지속되고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에

---

4) Huang Renwei,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iu*(World Economy Study), No.1 (1994), pp. 3~7.

대한 자국의 영향력과 통제력 상실이 방지되어야 한다.<sup>5)</sup> 중국은 현 상태에서 한·미 주도의 통일한국이 급속히 실현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급증될 것이기에 남북한에 대해 균형된 외교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면서 협력하는 상황인 현상태가 지속되는 한 다른 강대국이 한반도에 패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중국이 미·북 제네바 핵합의 이후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과는 전통적인 선린관계를 유지코자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주변 강국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군사개입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억제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안정되면 될수록 미국, 일본, 서구 선진국들의 대중국 경제투자 및 무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남북관계는 주변국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남북한 스스로가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대화와 협상을 주도하여야만 한반도 안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남북한 당국이 평화공존을 추구하여야 하며 남북한간 경협과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5)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 내에서 분분하다. 중국의 영향력이 과대 평가되고 있다고 보는 측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어느 국가보다 중국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정책조율이 없는 대북 정책은 포용책이든 강경책이든 성공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리차드 솔로몬 미국 평화연구소 소장의 미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서의 입장, 1999. 2. 10.

있다.

다섯째,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방법, 절차, 목표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자주적이어야 하며, 외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북한간의 협의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이 통일과정에서 통일된 한국이 친중국 성향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반중국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이다.

## 2. 중국의 대북한 정책

중국은 북한이 자국 안보의 완충지대로 유지, 존속됨으로써 주변 강국들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타파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이롭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우선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되지 않도록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고 정치적 유대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개입 전략을 전개하는 한편, 북한의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경제난 심화로 인한 미국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1996년 초 중국은 북한과 정치적 관계 복원 및 안보유대를 재개한 적이 있었으나, 북한의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1995년 6월 김정일은 노동신문 기고에서 중국의 경제자유화 과정이 북한 안보에 해로운 것이라는 입장을 폈다. 김정일은 사회주의 혁명의 배반자들이 사회주의의 理想을 왜곡한 결과,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형태를 취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중

국을 지칭하지 않고서도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 1996년 3월 중·북한간 고위급 軍인사 방문외교와 중국의 대북 군사무기 수출규모가 전년대비 약 2.5배 증가(약 350만 달러 규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sup>6)</sup> 1996년 7월 부총리 급인 羅幹 중국국무원 비서실장이 35주년 「중·북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체결 기념행사 일환으로 방북 하였으며 중국 北海艦隊 소속 두척의 함정도 같은 시기에 남포항을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었으나,<sup>7)</sup> 중·북 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미간 갈등고조로 인해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채, 대미 직접협상을 통한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을 얻어내려는 입장 때문에 중국은 대북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제지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8)</sup>

중국의 대북 식량 및 에너지 분야의 무상지원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곡물 12만톤(96년), 옥수수 19.5만톤(97년), 쌀 1.2만톤(97년), 곡물 4만톤(98년 6월), 곡물 6만톤과 화학비료 2만톤(98년 7월)이 무상 지원되었으며, 매년 4월경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상지원이 결정되었다.<sup>9)</sup> 특히 1996년 7월 羅干이 제35주년 중·북 우호조약 기념차 방북 하였을 시, 20만톤을 요구한 북한에 대해 중국은 식량 15만톤, 코크스 40만톤 무상원조를 약속하는 등 무상지원 규모는 늘어나

6) *Korea Herald*, 1996. 12. 12.

7) 「朝鮮日報」, 1996. 7. 22.

8) 김정일은 등소평씨 사망에 따른 弔電에서 등을 평가하기를 “등소평 동지가 조·중 우위를 위해 행한 공적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김일성사망시 중국이 “비할 데 없이 침통한 심정으로 마음속 가장 깊은 애도와 가장 정성 어린 위문을 전한다”라고 언급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만큼 김정일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과 대한민국 수교정책 등으로 인한 중국의 처사에 소원한 감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 1997. 2. 22.

9) 통일부, 「북한동향」, 390호, 1998. 7. 4 ~ 7. 10, p. 29.

고 있다.

1997년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과 클린턴 미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 회담이후 북한은 중국이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대중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자, 북한 당국은 중국의 지지 없이는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국 역시 증가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영향력 저지를 위해 대북 관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필요에 의해 양국의 정치적 관계 복원 노력이 1999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의 방중으로 가시화 되면서 1999년 10월 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sup>10)</sup> 이와 동시에 북한의 중국인민군 한국전 참전기념행사 개최<sup>11)</sup> 등으로 실현되었으며, 이와중에 중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지원 의혹이 대두되었다.<sup>12)</sup> 코소보 사태과정에서 중국은 향후 한반도 안정

10) 당가선 중국외교부장의 방북은 1999년 고위급 인사의 첫 방북이며, 당가선은 1995년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The Korea Times*(Internet version), "Prospects for PRC Foreign Minister's North Korea Visit Viewed," *FBIS-EAS-1999-1005*.

11) 1999년 10월 북한은 중국인민군 한국전 참전 49주년 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하고 중국군의 한국전 역할을 크게 찬양하였다. "DPRK Ministry Marks Anniversary of PRC Joining War," *FBIS-CHI-1999-1102*.

12) 중국회사들은 북한에 미사일 제조용 특수강과 함께, 가속도계, 조종기 등 첨단기술 및 장비를 제공해 왔으며, 일부 미국의 미사일 관련기술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이전되었음을 미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등의 정보문서와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워싱턴 타임지가 보도하였다. *Washington Times*, 1999. 7. 20.; *Washington Times*지에 의하면, 미 국무장관 알브라이트는 중국의 대북 미사일 기술수출 보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미사일 기술수출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MTCR규정에 의해 대북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Bill Gertz, "Technology transfers a concern, U.S. says," *Washington Times*, 07/21/99, p. 4; US Department of Defense's Early Bird news service for July 21; Bill Gertz, "Chinese Companies Sent Missile Parts to N. Korea,"; US Department of Defense's Early Bird news service for July 20. *Washington Times*, 07/20/99, p. 1.

과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미국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코소보 사태시 유고연방에 대해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전략을 대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요구에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군비경쟁과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영남의 방중시 江澤民 중국 주석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 발전을 우선 강조하고 남북관계, 북·미 및 북·일 관계 진전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발전 방식을 취할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sup>13)</sup>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나 북·일 관계 개선보다 더욱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없이는 한·미·일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한 것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 관계개선 노력이 불충분한 점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중국은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이 없는 미·북 관계개선은 미국의 대북 영향력만 제고될 것으로 우

13) Seoul, *The Korea Times* (Internet version) in English 0756; "Further on Jiang Zemin Meeting Kim Yong-nam," *FBIS-CHI-1999-0608*; Jiang Zemin said: "The CPC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ve always treasured PRC-DPRK traditional friendship. At present, both of our countries are building socialism in our own ways and in accordance with our respective national conditions .... further developing the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support the stand of both the north and south sides on realizing independent peaceful reunification, hope the north and south sides of Korea will improve their relations, and support the DPRK in it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the EU,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nd to finally realize normal relations with them....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orld ha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multi-polarization, but is still far from being peaceful.... The important task before the people of the world is to oppose hegemony and power politics an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ational new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그러나, 이봉 중국총리는 1996년 7월 방중한 북한 대표단에게 이미 '내정불간섭' 정책을 떠나, 북한의 식량난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식 농업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려하여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북한에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 지도층이 북한 사회의 와해를 두려워 해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접근안을 수용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반적인 개혁과 개방정책의 도입으로도 북한정권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 것이다.

대북 경제지원 및 교역 강화 전략은 무엇보다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정 억제를 위한 것이었다. 북한체제가 불안하면 북한의 무모한 대한국 무력위협 가능성이 증대될 것과 이에 따른 예상치 못한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데 있다. 중·북 교역 면에서 북한은 1997년 1·4분기 동안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곡물을 비롯한 식량, 식료품, 사료 및 종자 등의 도입을 대폭 늘렸다. 1·4분기 북한의 對중국 교역액은 수출 1천5백만달러, 수입 9천3백만달러 등 총1억8백만달러로 작년 1·4분기보다 10%이상 증가했다. 특히 동·식물성유지 12배, 종자 및 사료 3배, 밀가루, 옥수수가루 1.89배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석유, 코크스 및 플라스틱 제품, 면화 등은 각각 53, 66,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종자 및 약용식물이 8배이상, 목재, 목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2배이상 수출되었다.<sup>14)</sup> 북한의 對중국 식량 및 식료품 도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는 북한의 식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1998년 경우 김일성 생일선물로 중국은 식량 8만톤을 지원하여 북한으로부터 “좋은 전통과 진심의 원조”라는 공식감사가 있었다.<sup>15)</sup> 북경은 또한 북한식량난 지원 방편으로 중국 東北 三省에게

14) 통일원, '97년 1/4분기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1997. 5.

15)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건국50의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1998. 11.

북한과 변경무역을 할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여 변경무역이 성행되고<sup>16)</sup> 북한이 사용하는 원유중 70%는 중국에서 도입되고 있다.<sup>17)</sup> 향후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대북 경제지원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북한의 對중국 경제 및 교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3. 중국의 대한국 정책

중국은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기존의 북한과의 전통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국 정치관계 증진을 점진적으로 도모한다는 기본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중국은 특히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정치관계를 점차적으로 개선시켜왔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방중에 이어 1996년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특히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할 것을 표명함으로써<sup>18)</sup>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국간의 협의를 진전시켜오고 있다.

중·한 양국간 경제적 협력은 교역액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역액은 1993년부터 100억달러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는 130억달러, 1995년은 170억달러, 1996년에는 200억달러에 달하였으며,

14), p. 7.

16) *FBIS-CHI-97-191*, 10 July 1977; *FBIS-CHI-98-103*, 13 April 1998.

17) *FBIS-CHI-97-177*, 26 June 1977; *FBIS-CHI-97-209*, 28 July 1977; *FBIS-CHI-98-021*, 21 June 1998.

18) "China: Xinhua Cites Kim Tae-chung on Results of PRC Visit," *FBIS-CHI-98-317*. 13 Nov 1998.



1997년 경우 250억달러에 달하는 등 IMF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98년 212억달러로 중국의 제3대 교역대상국으로, 투자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sup>19)</sup>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에 중국의 참여를 공표한 데 대해 중국은 처음에는 북한을 의식, 4자회담에서의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였으며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만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의 입장을 반대하면서 4자회담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특히 한국의 대북 물자지원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sup>20)</sup> 또한 1999년 8월 1950년 한국전쟁이후 처음으로 중국은 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북경에서 개최하는 등 양국간 한반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안보논의를 개시하였다. 중국의 평화공존 외교노선 추구 표명으로 중국은 향후 북한의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의

19) China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 Statistics Data, 1996-1998 ([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http://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 Xiaixiong Yi, "The Impact of Beijing's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on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p. 6.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French Political Studies, 1999. 6. 9-10 재인용; 김시중,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서울: 동아시아연구회; 중국, 평화군축협회 발표 논문 1996. 10), pp. 3-5. 중국측 통계는 홍콩을 경유한 교역을 제외할 경우에도 한·중 양국은 각기 서로 제3대 교역국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이 현대에 금강산 지역 일대에 대한 30년간 독점 개발권을 문서로 주는 조건으로 현대가 6년간에 걸쳐 9억4천2백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현대의 대북 총 송금액은 1억5천8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동복,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제205회 임시국회, 1999. 7. 8; 북한의 금강산 관광 예상 총수입액은 북한의 1997년도 수출 총액인 7억3천만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Kim Hyung-Kook, "U.S.-North Korea Negotiations: A perspective from Washingt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대북 경제협력을 적극 지지하면서 한국과는 점진적인 정치·군사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Ⅲ. 한반도 평화과정: 중국의 입장과 역할 전망

한반도 평화과정을 위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와 분석이 있을 수 있으나, 한·미 양국이 1996년 4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서 4자회담에서 제안된 입장과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코자 한다. 한·미 양국은 4자회담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 무엇보다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임을 밝혔으며 긴장완화 조치 차원에서는 남북경제협력 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1)</sup>

이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사안으로 한국은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관계 성취,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정상화, 북한개방 환경조성, 한반도에서의 대량 살상무기 및 군비통제 실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을 제시하였다.<sup>22)</sup>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장에서는 중국의 입장과 역할을 평화정착 과정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북한 핵투명성 및 미사일 개발 문제, 정전협정 유지 문제(주한미군 문제 등),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 문제,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1) 4자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사항은 무력불사용,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불간섭 원칙에의 합의와 기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협의 등이다.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변화를 중심으로”, 『탈냉전기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문제』, (민족통일연구원, 1996. 9. 13), pp. 28~29 참조.

22) 김대중 대통령의 CNN 인터뷰, 1999. 5. 5.

## 1. 중국의 입장

### 가. 북한의 핵투명성과 미사일 개발문제

#### 1) 북한의 핵투명성 문제

중국은 역내 비핵국가들의 핵보유로 인한 핵확산이야말로 자국의 안보 이익과 영향력을 가장 크게 훼손할 것으로 인식하여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역시 중국의 군사, 안보태세에 직접적이고도 새로운 불안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핵개발과 다른 핵보유국과의 협력을 중요시 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 핵개발 억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대북 핵개발 억제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하고 미·북간 핵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였다.<sup>23)</sup> 이는 중국이 북한 핵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군사력의 변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1994년 10월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sup>24)</sup>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불

23) 중국은 1994년 6월 미국의 대북 핵관련 경제적 제재 경고를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향후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Larry A. Niksch,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greed Framework's Fading Prospects and a Look at Alternative Policies," *North Korean Scenarios and EU Responses*, (Conflict Prevention Network of the European Union, 1998. 10. 13) p. 10.

24) 핵보장 방법으로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과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이 있다. 소극적 안전보장은 핵 보유국이 비핵보유국들에게 핵공격을 하지 않고 적대적인 핵무기의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인 반면, 적극적 안전보장은 비핵국이 핵의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때 핵 보유국들이 핵무기로 이들 국가의 안보 보장을 의미한다. 미·북간 제네바 핵합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준하는 것으로 미국이 북한이 재래식 전쟁을 감행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된 면이 있다. 자체

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점증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기인하고 있다.

북한의 핵투명성이 완전하게 확보되려면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핵안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문제는 제네바 핵합의가 대북 경수로 제공조건으로 북핵 동결을 약속 받았지만 국제법상 구속력이 약하고 특별사찰이 2003년까지 유보되어 있어 북한 핵의 투명성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보장될 수 없는 데 있다.<sup>25)</sup> 북한은 그 동안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사용후 연료봉 밀봉작업에는 협조하면서도 IAEA가 요구하는 폐쇄된 영변 원자로 2기에 대한 특별 사찰을 거부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sup>26)</sup>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미·북간 협상에 의해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 확보를 위한 IAEA나 유엔 차원에서의 무력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IAEA의 대북 조치로 인해 향후 유엔의 대북 무력행사가 명분화되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한 내용은 Tong Whan Park, "North Korea and the Surrounding Power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한국세계지역연구협회의 발표 논문, (1999. 11. 26), pp. 5-6.

25) "North Korea's Nukes," *Washington Times*, editorial, 1996. 11. 8; 미국이 북한과 맺은 제네바 핵협정은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법적으로 핵경수로와 중유를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Letter Report*, 1996. 10. 1 참조.

26) *Korea Herald*, 1996. 11. 9.

##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

북한의 과거 핵 의혹 외에도 공격형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 위협성은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중무장한 북한이 한국에 대해 가하고 있는 최대 위협중 하나는 서울 지역을 겨냥한 대포와 로켓이라고 언급된 바 있어<sup>27)</sup>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서울 지역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40km 이상, 구경 240mm인 동시다발적인 공격능력을 보유한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대(multiple rocket launchers, 북한명: 방사포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19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북군사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對방사포 요격시스템(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or, ACTD)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sup>28)</sup>

뿐만 아니라, 미·북간 제네바 합의이후에도 1,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7기의 북한 노동1호의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sup>29)</sup> 또한 연간 100기의 스커드 미사일 생산능력을 보

27) 「연합통신」, 1997. 5. 22.

28) 「중앙일보」, 1997. 1. 24.

29) *Janes Defense*, 1997. 5. 28. 제인스 디펜스紙에 따르면 美 국방정보국(DIA), 중앙정보국(CIA), 국가경찰실(NRC) 및 공군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의 노동1호 이동발사대 3기가 지난 3월24일 북한 북동부에서 관찰됐으며 평양에서 약 1백km 떨어진 군사시설에 7기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혀 북한은 현재까지 10기의 노동 1호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3년 노동1호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으며, 이미 3기의 노동1호 미사일을 동해안에 배치한데 이어 7기의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통신, 1997. 5. 28; 노동 1호의 재원은 길이 15.2m, 직경 1.2m, 탄두무게 7백70Kg, 거리 1천3백km, 탄두형태는 재래식 고성능 폭발물 혹은 화학물, 목표물 오차 3-4km로 관찰됐는데 유도장치가 없고 목표물 오차가 커 전략공습용이라기 보다는 테러용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정거리는 적재연료 무게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적

유하고 있는 북한이 1995년부터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한국의 대북 미사일 공격체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미국의 한 연구소는 밝히고 있다.<sup>30)</sup> 특히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지 단독으로 대한민국 전쟁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한 것이다.<sup>31)</sup>

더욱이, 사정거리 2,000km인 북한 大浦洞 1호(일명 노동2)는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이어서 사정거리 4,000~6,000km인 대포동 2호는 2000년경에 실용화될 것으로 추정 되었으나<sup>32)</sup>, 1999년 여름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동북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sup>33)</sup> 대포동 2호는 일본 전역은 물론, 알라스카와 하와이를 겨냥할 수 있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북·미 베를린 미사일협상에서 발사 중지와 개발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사일 주권을 북한이 가지고 있건 없건 간에 주변 국가에

---

재연료가 적어지면 탄두를 늘릴 수 있으며 이동발사대는 러시아제 MAZ-543을 개조, 길이를 40m로 늘렸으며 수직발사를 위한 지지대가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의 국제군사협력국장인 레오니드 이바쇼프장군은 북한이 사정거리 1300km 중거리 유도미사일인 노동1호를 북한 내에 실전 배치했다는 증거는 없으며 그 같은 추정으로 노동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일본과 대만이 참여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타르타스통신」, 1997. 5. 18, 「연합통신」, 1997. 5. 19.

- 30)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배치된 192기의 패트리엇 미사일만으로는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의 주요 도시를 방어하는 데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국에 전역미사일 방어체제를 공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통신」, 1997. 4. 17.
- 31) 이춘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국의 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1999. 3. 20), pp. 33-34.
- 32)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실태,” 「북한」, 1996년 11월호, pp. 191~195; 북한은 이란, 리비아 등에 1980~1993년 동안 총수출액 204억중 30%인 80억달러 규모로 무기를 수출한 바 있다. 「世界日報」, 1996. 9. 26; 美 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1996년 봄에 사정거리 500km인 스킵드-C 미사일 관련 부품을 이집트 등에 수출하고 있음을 밝혔다. *Washington Times*, 1996. 6. 21.
- 33) 「世界日報」, 1996. 6. 8;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발사실험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규제를 법적인 차원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밝혔다.<sup>34)</sup> 한국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여 외교적 제재를 가할 것을 표명하였다.<sup>35)</sup> 당시 중국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 및 개발은 주권에 관한 사안으로 미국이 간섭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미사일 수출은 미국이 적절히 보상한다면 자제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sup>36)</sup>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중국의 입장은 모순된 면을 보였다. 중국은 처음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견제 능력을 상회한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중단 요구에 대해 냉담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보유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자주국가임으로 미사일 개발은 주권에 속하는 것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를 심각히 여기지 않았다. 1999년 3월 9일 朱鎔基 중국 총리는 중국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개입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중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의 민감한 반응은 역내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진하고 미·북간 정치적 협상을 저해하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 문제는 정치적 협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판

34) 「중앙일보」, 1999. 7. 24.

35) 「동아일보」, 1999. 7. 24.

36) Leon V. Sigal, "Beyond the Agreed Framework to a Missile Dea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13. 북한은 미·북 미사일회담 제3차 협상(1998. 10)에서 향후 3년간 미국이 해마다 10억달러를 보상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단한 것이다.<sup>37)</sup>

그러나 그후 중국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의 訪中과 서해안 남북한간 무력 갈등이후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sup>38)</sup>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가?

중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일본이 북한 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TMD 계획에 동참하면서 보다 더 정교한 미사일 관련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기존의 중국이 향유하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북아에서 향유하고 있는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급격히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의 TMD 구축이 가시화되고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가능성이 거듭 표명되자, 중국은 대북 군사동맹을 강화하지 않고<sup>39)</sup>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을 지지 표명함으로써 미·북 베를린 미사일 협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가 중단되는 데 일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37) 당시 북한은 미사일 수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이에 상응한 현금보상을, 미사일 개발, 생산, 배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전제로 미사일문제 타결안을 제시하였다. 「계간 북한동향」(1993. 3), pp. 195-198.

38) *FBIS-EAS-1999-0629*.

39) 중국의 한 인사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98년탄도미사일 발사이후 대북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여 한·미·일의 TMD 구축에 대항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인사와의 면담에서, 1998. 9.

야기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은 단순히 미국과 일본과의 전쟁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 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 본토, 오키나와 등지를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한반도 전쟁 억지체제의 제2 요소인 미군과 일본 군사력의 한반도 증파를 저지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sup>40)</sup> 더욱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가정할 경우,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전쟁 개입 자체를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sup>41)</sup> 판단하면 북한의 한반도 전쟁 시도 가능성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핵확산방지조약」과는 달리 미사일 개발 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국제적 조약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의 북한 가입을 위한 중국의 강력한 요구가 없는 점 등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형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MTCR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300km이상의 미사일 관련 기술 및 부품 수출을 제한하는 MTCR로서는 북한의 ICBM개발 억제 효력이 약한 점이다.

셋째,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문제로 인해 미국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미사일 방위개발에 나선 데에는 중국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미사일 개발통제 노력과는 달리 중국의 대북 미사일 개발 통제는 동북아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42)</sup>

40) William T. Pendley, "North Korean Challenge: Short and Long Term,"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 10. 29), p. 4.

41) 이춘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국의 안보,"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1999. 3. 20), pp. 33-34.

4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9. 2. 3.

### 나. 정전협정 유지 문제

1950년 한국전쟁은 군사정전위(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AC)와 군사정전협정(Military Armistice Agreement, MAA)에 의해 종결되면서 남북한은 적대적 대치상태를 현재까지 지속하여 왔다. 실질적으로 중국과 북한군은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와 대치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한간의 군사력 증강을 감시하는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거나 군비축소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였다. 북한은 1991년 3월 UNC가 UNC측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에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을 임명하자, 한국군 장성이 UNC를 대표할 수 없다하여 군정위 본회의를 중단시킴으로써 MAC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MAC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안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이미 제기한 정전협정 폐기 필요성을 1994년 4월 19일부터 재론하면서 정전협정 무력화 강도를 점차적으로 높이면서 호전태세를 갖추어 왔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 북한측 대표단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고 1994년 12월 15일 북한의 요구에 의해 중국은 판문점 군사정전위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중립국 감시위원국인 체코(1993.4)와 폴란드 대표단(1995.12) 역시 북한지역을 떠남으로써 정전위 활동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북한의 호전 태세는 1995년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서 정찰활동을 감행하는 등 더욱 과감히 나타났다.<sup>43)</sup>

43)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휴전선 인근 전방기지에 170mm 자주포를 300여문에서 500여문으로, 240mm 방사포를 140여문에서 280여문으로 각각 증강

남북한 간의 전쟁상태 종결을 위한 미국과의 단독 협상안을 제의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1995년 5월 정전위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에게 미국과 북한간 판문점 군사회의를 제안, 북한이 수용함으로써 미·북장성급 회담이 몇 차례 성사된 바 있으나, 1995년 9월에 중단되었다. 이에 북한은 1996년 2월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 단계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공동 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등<sup>44)</sup> 미·북간 군사협상을 요구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교착상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유엔사령부의 참석없이 북한과 직접 군사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안한 데 있다. 미국의 직접회담 제안이후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미·북 군사회담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유엔사-북한군 회담의 중요성이 많이 상실되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자체가 부실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과 북한의 계속되는 정전협정 파기 기도 입장으로 4자회담에 적극 임하기 시작하였다.<sup>45)</sup> 북한은 1999년 6월 남북 서해교전 사태시 북방 한계선 문제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논의를 4자회담에서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기정 사실화 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이다.<sup>46)</sup>

배치하여 기습공격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世界日報」, 1996. 12. 6.

44) 북한외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 2. 22.

45) 이현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4-6.

46) 1999년 6월 21일 주중군 주중국 북한대사는 서해교전 당시 북한이 거론한 북방 한계선 문제 (북방 5개 도서는 북한의 영토라는 주장)를 미·북간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처음 있는 일이다. FBIS-EAS-1999-0623

북한의 주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 자국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시켰음에도 북한의 대미 제안에 대해 북한과는 상이한 견해를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한의 對美 접근을 지지하면서도 자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대하고 한국의 기존 입장인 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47)</sup> 1996년 4월 沈國放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현재의 정전협정에 대체될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은 아니나 직접적인 利害 당사자국이며, 중국은 역시 서명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표명하여 한국과 중국이 정전협정의 관련국임을 분명히 하였다.<sup>48)</sup>

구체적으로 중국이 정전협정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상태에서 한반도 현안에 있어 남북한과 주변 강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무모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중국이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지난 5년간 軍전투력 증강에 진력해 온 사실을 중시하고 특히 1998년 대포동-1 미사일 발사실험과 1999

47) 중국은 정전협정이 1953년 북한 인민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 당사자로 하고 유엔군을 또다른 당사자로 하여 공식적으로 조인되었으며, 아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정전협정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고자 하는 어떠한 조치도 정전협정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시행될 수 있으며 또한 남북한이 합의한 선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Zhou Xingbao,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 5), p. 6.

48) 「人民日報」, 1996. 4. 16, 4. 18, 소치형,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표 논문(1999. 11. 26) pp. 7-8. 재인용.

년 대포동-2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이 훼손되고 있음을 내심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위협전술이 한·미 연합군의 대북 전쟁 억지력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은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개입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7년 5월 코언 미 국방장관이 미국은 북한이 대남한 공격을 저지하는 데 주력해 왔으나 미국의 전쟁억지 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상황을 감안할 경우 북한의 태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한 점을<sup>49)</sup> 중시하였으며 남북한간의 국지전 양상을 띤 무력대결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국 학자는 한반도에서 소규모 무장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냉전 초기와 같은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50)</sup> 중국은 북한의 전쟁挑發로 인한 북한 붕괴로 미국의 대한반도 주도권이 강화되고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중국은 1997년 3월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자동개입을 명시한 중·북 우호조약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임을 처음으로 밝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선제 행동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唐家璇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국제적 상황 및 남북한 유엔 가입 등으로 인해 중·북 우호조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남아 있어 이제는 친선의 의미만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중국은 북한의 대남 선제 공격행위에 대해 한·미간의 공격을 받

49) 코언 미국방장관은 북한의 잠재위협 폭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아시아 및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병력을 現수준에서 유지키로 한 '4개년 국방전략검토 보고서'(QDR)를 옹호하였다. 그는 "누구도 북한이 앞으로 2년, 3년, 5년안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QDR은 아시아및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을 각각 10만 명씩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6만 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0) 陳峯君(북경대 교수), 「조선일보」, 1997. 1. 14.

을 경우, 북한을 자동 지원하여야 할 아무런 부담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sup>51)</sup>

이는 향후 중국은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사전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만약 한국군만이 대북 무력제재를 감행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군사 행위를 정전협정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한국을 억제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암시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자주 나타나는 바, 구체적인 예로 1996년 10월 북한의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중국은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발표에 동의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문제로 인해 안보리 의장의 대북 경고성명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sup>52)</sup> 이러한 중국의 강력한 입장은 1994년 12월 중국이 정전위 군사 대표단을 철수시킨 이후에 나온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1996년 중국의 입장변화는 1993년 5월 북한 핵문제로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대북 제재 경고 결의안 채택에 대해 중국이 기권하고 의장성명 발표까지도 단호히 반대할 때에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군사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존하고 있는 중·북 동맹조약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수정이 표명되고 공개되어야만 주변국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해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국 현지도부는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을 구원치 못한 데(lost North Korea) 대한 중국내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비난을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중국·북한 국경 부근 배치와 대량 탈북자의 중국내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민심 혼란과

51) 『동아일보』, 1997. 3. 21.

52) *Korea Herald*, 1996. 10. 18.

경제적 피해 등을 가장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1)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문제

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의 남북불가침 규정과 이에 입각한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되자<sup>53)</sup>, 남북간의 전쟁이 종식된 것으로 보고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미 외교관계 수립시 미·북 평화협정이 동시에 체결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평화문제 논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는 첫째, 한국은 정전협정 서명국이 아니며, 둘째, 한국과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다. 황장엽 망명 사건이후 개최된 1997년 5월 한·중 외무장관 북경회의에서 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남·북 당사국간에 의견이 일치되면 중국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4자회담에 참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법적 근거를 내세워 4자회담내에서 정전협정을 협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북한의 대미 정전협정 폐기 협상 논리를 반박하였다.

중국은 그 동안 남·북 관계가 안정치 못한 것은 1954년에 남북한이

53)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보복을 지켜 본 북한의 안보불안감은 증폭되었다. 중국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인 1991년 12월 북한은 한국이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불가침조약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수용하였으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핵 사찰문제가 대두되면서 남북한 정치적 관계는 악화되고 남북기본합의서는 이행되지 않았다.



정전협정만을 체결하고 그 이후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데 연유한다고 보고 남북간 정치적 협상과 합의를 증시하고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경우 체결 당사자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합의한 평화협정인 경우에 한해서는 비록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이기 하지만 자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임을 크게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및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인해 사실상의 전쟁상태가 이미 종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군이 1950년 당시 한국군과 싸운 것이라기보다는 16개국 유엔회원국들과의 전쟁이었기에 한국과 수교시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시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교 협정 제 2절에 의하면, 양국은 지속적인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합의한다고 표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1950년 한국전이 공식적인 전쟁선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당시 한국과의 전쟁상태에 개입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서는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을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어 미·북 외교관계 수립시 한·중 수교와 같은 맥락의 조항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할 것이며,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미국과 함께 참여치 않기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이 그 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에 중국의 참여를 부정적으로 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남북한, 미국, 중국이 체결하는 평화협정보다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있으나, 만약 남북한이 미국의 참여를 합의한다면, 중국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주한미군 지위 및 존재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주한미군이 6개월 이내에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70년대에는 평화협정 체결이후 철수가능 대상으로 변화하였다. 80년대 후반(1987년)에는 단계적·점진적인 철수를, 90년대 초반에는 남북군축에 상응하는 비율로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다가, 1992년부터는 통일전까지 철수의사 표명후 통일이후시에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고<sup>54)</sup> 1998년에는 '7년간 단계적 철수' 까지도 요구하고 있다<sup>55)</sup>. 북한의 입장이 시대에 따라 달리하긴 하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한·미 방위조약의 폐기 요구는 실질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sup>56)</sup>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의 철수 및 지위 문제는 한·미간의 협의 사항이므로 북한의 단계적 철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즉 한국은 북·미 외교 정상화, 남북간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이 반대하자 북한은 지위변경 문제로 바꾸어 논의하자고 4자회담에서 제의한 바 있었다.

1990년대 구소련 붕괴이후 중국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반대도

54) 홍용표,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29.

55) 「조선중앙통신」, 1998. 6. 27.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북한」, 대변인 성명; 1991년 당시 김용순- Kartman 회담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56) Leon V. Sigal, "Beyond the Agreed Framework to a Missile Deal,"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17.

찬성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sup>57)</sup> 중국은 현재의 주한미군의 존재가 중국안보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주한미군이 자신을 대적하리라는 예상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무모한 대남 침략행위나 무력통일 기도로 인해 중국이 원치 않는 시간에 미국 및 일본과의 적대적 무력갈등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북한이 붕괴되고 한국주도로 통일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원치 않기 때문이다.<sup>58)</sup> 현재 중국의 입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용인하고 있을 뿐이다.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조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남북한이 평화협정에 합의할 경우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후 중국은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전에 북한이 상당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감축 요구보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실현성이 보다 큰 방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은 남한 위주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중·미간 대만문제로

57) Chu Shulong,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 10. 28. - 10. 29.

58) Andrew Wedeman,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 79.

인한 군사적 갈등이 야기된다할 지라도, 현재의 절반 규모로 감축된 주한미군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만 주둔할 경우 주한미군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는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이후 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통일 후에는 주한미군이 한·중 국경 부근에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고<sup>59)</sup> 통일이전처럼 남쪽에 주둔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 다.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문제

한국의 4자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처음부터 미·북 관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북한이 4자회담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시 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미·북 관계 개선에 있어 중국의 입장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남북한의 개선노력이 없는 북한의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이 점은 중국이 대미 관계개선을 지지하기 전에 항상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해 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sup>60)</sup>

중국은 향후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경제난 극복은 더욱 어려워져 중국의 힘만으로 북한을 회생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대미 및 대일 관계개선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으로 인한 대북 '강권정치'로 인해 북한이

59) Quansheng Zhao, "The Chinese Position on the Korea Four-Party Talk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25.

60) *FBIS-CHI-1999-0608*.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99년 6월 김 영남-강택민 북경회담에서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지칭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중국이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거부해야됨을 강조 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남은 미국을 지칭하지 않고 중국이 해외의 패 권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보호한 데 감사를 표하였다. 이처럼 중국 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설정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61)</sup>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베를린 미사일회담(1999.9.12) 타 결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미·북 관계 개선만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999년 6월 일주일간의 남북한 서해교전 당시 중국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군사 무기를 한반 도에 도입하는 것은<sup>62)</sup> 북한을 겁내주려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미국 의 대북 위협 정책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군의 유고슬라 비아 연방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 행위와 같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북·미 관계개선은 지지하나 미국의 대북 영향 력 증대는 환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미·북 관계개 선으로 기존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급감시키는

61) Kim Yong-nam said: "... DPRK-PRC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have withstood the test of history and have powerful vitality. We hope to take the current visit to China of the DPRK delegation...as a turning point, and make concerted efforts to further consolidate and develop DPRK-PRC traditional friendly relations.... The DPRK supports China's cause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CPC and the Chinese Government have ensured stability and unity at home, and safeguarded peace and opposed hegemony abroad..." *FBIS-CHI-1999-0608*.

62) *FBIS-CHI-1999-0619*. 2척의 미국 핵잠수함이 이미 한국 해군기지에 도착 하였으며, EA-6B 정찰기와 빈센즈(Vincennes)항공모함이 한국 쪽으로 파 견되었다.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자국의 대한반도 특히 대북 영향력이 확보되지 않는 급속한 미·북 관계 개선에 앞서 1999년 대북 관계 개선에 더욱 주력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북 관계 개선의 속도와 정도가 과거의 중·한 관계 개선의 속도와 비슷하기를 원할 것이나, 미·북 관계가 급속히 추진될 경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4자회담에서의 한국측 입장을 더욱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남북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문제

북한은 남북한 군축안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는 1990년에 제안된 것으로 군사훈련과 연습제한, 무력감축 합의후 3-4년내 3단계 병력감축, 정규 무력 감축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 군사조직과 민간 무력의 해체를 골자로 하는 병력 중심의 감축에 비중을 두었다.<sup>63)</sup> 반면, 한국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남북한 군사 당국간 직통 전화 설치, 주요 군사훈련 상호 통보, 군 인사 상호교류 등 3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이 실현되기를 북한에 요구하고 4자회담 정례화를 제시하고 있다.<sup>64)</sup>

1990-1992년 8차에 걸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신뢰구축에 관한 5개항이 합의된 바 있으나, 북한의 군축 제안이 모두 수용되지 않았으

63)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공저,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pp. 210-213.

64)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방안,"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심포지엄 논문집(1999. 12. 7), p. 46.

며, 북한의 핵위기로 인해 남북한간 군축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1. 대규모 군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제 문제, 2.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3. 군 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4. 대량 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5. 검증문제 등이 있었으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sup>65)</sup>

이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신뢰구축 협상(Confidence-Building Measure, CBM)을 지지하나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CBM이 없이는 남북한 군비경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써 한반도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된다는 입장에서이다. 둘째, 중국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다자 안보기구를 통한 남북간의 군축과 군비통제 실시의 효율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기때문이다. 국제적 기구에 의한 남북간 군축이 실현될 경우, 자국의 대북 군사 지원을 통한 영향력 및 통제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셋째, 만약 중국이 한반도 긴장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게 되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 및 소위 '패권주의'를 억제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넷째, 만약 미국이 대북 전쟁에 승리하여 북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미군 사력이 중·북 국경 지역에 배치케 되어 중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결과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러시아와 공동으로 미국의 개입을 저지키 위해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sup>66)</sup> 여하튼 중국은 상기의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실현

65)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36-139.

66) 「Hongkong Standard」, "Jiang Zemin Reportedly Rejects Pact With India,

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지도부로서도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상당 수준의 대북 정치 및 경제적 대화와 협력이 실현됨으로써 북한이 신뢰구축을 통한 군사력 감축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보고 남북한 정치적 신뢰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와 관련, 중국은 4자회담 4차 본회담 분과위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5대 협상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관련국간의 대화와 협의를 바탕으로 긴장이 완화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의 5대 협상원칙은 첫째, 상호신뢰 구축 조치를 향한 협력이 광범위하게 증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의 구축 및 개선이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당사국간 관계증진이 지지되어야 하며, 여타 국가들은 물론 북한과 미국관계의 점진적 정상화가 환영받아야 하며, 셋째, 당사국은 군사분야에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위해 협력해야 되며, 넷째, 당사국은 잠재적 군사적 분쟁을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섯째, 당사국은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이고 돌발적인 군사적 행위를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7)

특히 중국은 현재 남북한의 불신과 적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 한반도 긴장이 더욱 촉진되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

Russia," *FBIS-CHI-1999-0610*. 강태민 중국 국가 주석은 일부 중국 군과 정부 연구기관이 제시한 미국 주도의 NATO의 대유고 군사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러시아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맹관계 형성에 대해 그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67) 「연합통신」, 1999. 1. 23.; "China: PRC Outlines 5 Principles To Reduce Tension in Koreas." *FBIS-CHI-99-022*.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보다 남북간 상호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남북한 당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를 공동으로 협력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교류·협력과 정치협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 2. 중국의 역할 전망

앞서 언급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동북아 안보전략의 역동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자신의 역할의 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우선 순위는 중국의 주변 강국과의 관계 변화, 특히 중·미·일 역학관계 상에서의 중국의 전략적 위상, 중국의 미·북 관계 평가, 남북한 관계, 한국과 중국 관계 등으로 지적될 수 있다.

### 가. 중·미·일 역학 관계

한반도 평화과정에 있어 중국은 중·미·일 역학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과 미국 관계와 미·일 관계 변화에 따라 중국의 역할이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은 중·미·일 3각관계 변화에 따른 중국의 위상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일·중 관계에 있어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지지할 것이며, 일본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삼각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아 이를 반대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미관계가 밀월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때 중국은 한반도 체제변화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강도는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할 때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중·미·일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 중·한국·북한관계에 있어서의 정경분리 정책을 축소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동북아 중·미·일 관계에 있어 균형자 역할을 한반도에서의 현상유지 보다 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 중국의 대한민국 및 북한에 적용하고 있는 균형외교는 한국과 북한의 불만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중국의 4자회담 참여를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은 한·중 경제협력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보관계가 초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중시하여 왔다.

중·미·일 삼각관계라는 개념은 냉전시대 미·중·소가 갖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일본이 냉전시대 구소련이 대미 대중 관계에 있어 행사한 전략적 독립성을 일본이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역할의 폭은 중·미·일 관계 중 중·미 관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다음으로 미·일 동맹의 공고성에 대한 중국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1) 중·미 관계의 악화

전반적으로 중·미 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소원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구소련 붕괴이후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정당한 위상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클린턴 미대통령의 방중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와 의회가 양국관계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중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중·미 양국정상이 미·중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는 양국간 안보 및 경제협력과 자국의 발전에 크게 손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주도의 NATO의 대유고 공습과 중국대사관 폭파사건 등으로 양국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결과가 쉽게 나타난 것이다.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현재의 미·중 관계의 악화를 '갱신된 양극간 긴장(renewed bipolar tension)'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출현되었으며 주로 미국의 對中 갈등 기도에 기인하며 결국은 다극화 추세를 저해하는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sup>68)</sup>

1997-1998년의 미·중 관계 개선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분석된다. 1997년 클린턴의 방중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고 정부간 회담의 연례화와 핫라인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미국은 중국에 핵기술 이전을, 중국은 對이란 핵기술 이전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선언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미국으로서는 세계적인 핵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의 협력과 대중 무역적자 만회를

68) "France's Chirac Warns Risk of Bipolar US-China Tension," *FBIS-WEU-1999-1104*.

위한 미국상품의 중국시장 개방 필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경제 및 안보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한 미국의 대북 개입전략의 성공여부 역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원한 관계를 청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국의 요구인 대중 무역역조 시정문제에 대해 중국은 20억 달러 규모의 미 항공기 구매를 결정하고 아시아 금융위기 와중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자제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중국의 안보 이해와 맞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양국간 중요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양국간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첫째, 미국의 대중 안보관련 비난은 점차로 강해지고 있어 양국관계가 훼손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핵, 미사일 및 위성개발 관련 기술을 중국이 절취하여<sup>69)</sup> 중국의 대미 미사일 공격능력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사정거리 8,000km 東風-31 신형 탄도미사일과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내 들 수 있는 東風-41의 실전 배치 가능성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이러한 중국의 미사일 개발기술이 미국으로부터 절취한 탄두와 미사일 기밀을 이용한 신형 이동식 ICBM에서 나온 것으로 강력히 비난하여<sup>70)</sup> 미사일 문제로 인한 양국간 과학 기술 협력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69) *China Daily*, "Cox report lacks basic knowledge," 1999. 7. 16.; 중국은 원자탄 및 수소탄 개발 기술을 보유한 이후 이를 근거로 자국의 능력으로 중성탄을 설계 제작, 핵무기 기술을 제고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비난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70) *Washington Times*, 1999. 6. 28.

둘째, 중국의 대대만 미사일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만 포함, 전역미사일방위(Theater Missile Defense, TMD) 계획과 지속적인 미국의 對대만 무기수출<sup>71)</sup>, 중국의 정치범 박해, 티베트의 정치적 독립문제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양국 관계를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문제와 관련, 중국이 미국과 맺은 3개의 공동성명에 의거 '하나의 중국'을 미국이 수용하여야 함을 촉구한 데 대해, 3개의 공동성명이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s)에 우선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미국은 이 법에 의거 대만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셋째, 양국이 세계안보 및 경제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며, 미·일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중·미간 전략적 협력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미·일 신안보체제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대만해협 상에서의 역할확대를 묵인하고 있어 양국간 진정한 신뢰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요구와는 달리 대만통일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up>72)</sup>

넷째, 미국이 주도하는 多者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合作安保)의 실효성에 대해 중국은 의문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본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것은 상호

71) 北京(Beijing), 「世界知識」, 11號, 1999. 6. 1; , Chu Shulong, "Sino-US Relations Pushed into Perilous Waters," *FBIS-CHI-1999-0601*.

72) 중국은 동북아 군사태세 강화의 일환으로 1997년 東海함대의 기동훈련은 전투력과 합동작전 등을 통해 실전에 가까운 규모로 수륙양용 장갑차를 앞세운 상륙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靑島에 기지를 둔 北海함대가 황해의 한 해역에서 1백여척의 군함을 동원, 2개월간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解放軍報」, 1997. 5. 21; 중국 해군 3대 함대의 동시 기동훈련은 향후 발생 가능성이 짙은 釣魚島 및 黃岩島 영유권 분쟁 및 동북아에서의 분쟁을 예상한 군사 연습이며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대만해협을 겨냥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중국의 군사 훈련인 점이다.

보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모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미·일,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닌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북아에서 유럽식 CSCE의 제도화와 재래식 군비감축 협정(CFE) 타결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협력안보에의 적극 참여를 중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중·미 안보 협력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진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간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양국 안보관계의 악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역조문제에 협력 가능성이 커서 미국의 對中 최혜국대우(MFN)의 자동 연장이 예상되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국간 적대적인 군사적 대치 국면이 크게 조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 2) 미·일 동맹 강화

중국은 미·일 안보협력이 과거보다 더욱 공고히 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방위적인 군사적 위상을 억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여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이 자신의 대북 미사일 방위체제 능력을 심각히 인식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독자적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핵협상에 의한 대북 지원 계획으로 일본이 KEDO 분담금을 재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입장과는 달리<sup>73)</sup> 일본이

73) 한·일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문제와 KEDO 분담금문제 연계성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46억 달러 규모의 KEDO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됨을 표명한 데 대해 마사히코 고무라 일본 외상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실행되면, 일본인들의 대북 여론 악화로 일본이 분담금을 부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KEDO 분담금을 일시 중단할 뜻을 표명한 점을 중국은 우려하였다. 일본이 대북 정보수집 위성발사를 표명한 것 역시 향후 일본이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중국은 판단하였다.

1998년 11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訪日 직전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98년 8월의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는 각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자위 범주를 넘어서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 지역의 긴장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을 빌미로 미국과 TMD 공동연구개발에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대만이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고 미국과 일본의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sup>74)</sup>

미국은 어느 국가도 2015-2020년까지 미국의 국력을 따라 올 수 없는 '전략적 기회(Strategic opportunity)'를 자국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미 백악관이 작성한 "21세기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in the New Century)" 보고서는 미국안보의 강화, 미국 경제변영 및 해외 민주주의 육성을 미국의 3대 주요 전략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sup>75)</sup> 중국의 학자들은 미국이 이러한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이 군사동맹 강화 전략을 가속화하는 '兩洋'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서쪽 진영에서는 대서양 전략을 실시하여 나토전략에 대한 신 개념을 제시하여 동

---

1998년 8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KEDO 분담금 지급을 잠시 중단하였다.

7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9. 2. 3.

75) Young Whan Kihl, "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s Security Problem,"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Korean-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ctober 15-17, 1999, p. 1.

쪽으로 확대하여 러시아의 전략 공간을 억제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NATO 타입의 전략 구상으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전략 공간을 억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76)</sup> 특히 중국은 1997년 미·일 양국이 일본유사사에서 주변사태로의 군사활동 범위 확대와 1999년 4월 일본 중참의원의 신일미방위협조지침에 관련된 주변관계 법안, 자위대 수정안, 日美物資 및 勞務相互提供에 관한 수정안 통과를 우려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투사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으며, 더욱이 미·일 TMD 공동 연구개발로 공격 및 방어수준이 냉전시기보다 크게 증대되었음을 지적하였다.<sup>77)</sup> 미국의 구도 하에 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력 제고가 가속화될 경우 중국은 국가능력 제고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 대해 보다 더욱 강경한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78)</sup>

#### 나. 미·북 관계

중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미·북 관계 개선이 갖는 전략적 함의는 매우 큰 것이다.

중국은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미국의 개입은 환영하나 중국의 이익을 배제한 급속한 미·북 관계 개선은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기는 하나 북한붕괴를 초래할

76) Liu Jiangyong, "Three Major Factors in East Asian Security," *Shijie Zhishi, Beijing*, No 17, pp. 26-27. 1999. 9. 01, *FBIS-CHI-1999-0928*.

77) 牛强(중국인민평화 및 군축 협회 부서기장), "동북아시아 안전 정세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동아시아연구소-중국인민평화 및 군축협회 서울 워크샵, 1999. 9. 6), p. 3.

78) 「人民日報」, 1999. 6. 30; Li Changjiu, "Boost All-round National Strength, Preserve World Peace". *FBIS-CHI-1999-0630*.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 ‘내정불간섭’ 원칙 차원에서 북한에 압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붕괴가 가시화 되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당국이 對南 무력 局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코자 할 것이다.<sup>79)</sup> 중국은 金正日이 실권을 행사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점으로, 한국 및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경제협력과 지원을 지속하고 미국과 한국의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최근의 미·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완화 조치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한 데 있다.<sup>80)</sup>

백남순 북한 외상은 금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이 대북 적대 행위를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는 미·북간 관계개선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성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81)</sup>

중국 역시 미·북 관계개선을 적극 지원할 이유가 없으며 또 그들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해지는 것도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79) 「연합통신」, 1997. 5. 20. 중국 방문직후 존 셸리캐슈빌리 美합참의장은 중국 軍 수뇌부와 회담에서 북한 식량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차신과 중국 군사 지도자들은 북한이 기아에 직면하고 있으며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고 북한의 현재 상황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으나 중국 군부의 입장은 북한 내부 사정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아 현재 상황이 갈등으로까지 표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80) 「人民日報」, 1999. 10. 28.; Zhao Jiarning, "Favorable Turn Has Occurred in DPRK-US Relations," *FBIS-CHI-1999-1027*.

81) "Kartman Interviewed on DPRK," *FBIS-EAS-1999-1103*.

점도 명백하다.<sup>82)</sup> 다만 중국은 자신과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 미·북 관계 개선이 실현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빌미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은 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제 상에서의 중국의 지지와 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도 중국의 경제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리 리포트(Perry Report)<sup>83)</sup>에 담긴 미국의 대북 정책제안에 대해 중국은 지지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한 특히 미사일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간 관계개선이 단시일내 실현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sup>84)</sup>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미·북간 확고한 의견과 깊은 불신, 남·북간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한 긴장 등으로 인해 미·북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sup>85)</sup>

#### 다. 남북한 관계

중국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

82)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건국50의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발표논문집, (1998. 11. 14) p. 14.

83) William J. Perry,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by Dr. William J. Perry, U. 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1999. 10. 12.

84) "Beijing Radio Views DPRK-US Talks in Berlin," *FBIS-CHI-1999-1115*. 중국은 미·북 양국이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실질적인 타협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향후 양국간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85) 「人民日報」, 1999. 10. 28.; Zhao Jianning, "Favorable Turn Has Occurred in DPRK-US Relations." *FBIS-CHI-1999-1027*.

동과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한국의 대북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현재 북한주민들의 식량 배급량은 1997년 가을 경우 하루 1백g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과거 戰時때 가 동했던 것과 같은 배급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86)</sup> 이에 대해 한국은 북한의 식량난 가중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비는 축소되지 않고 있어 대한국 위협태세가 더욱 고조되는 조짐을 우려하였고 중국은 자국, 한국, 및 국제사회 등의 지원으로 극복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sup>87)</sup> 북한 식량난에 대한 한국의 평가가 달라진 것은 북한이 1996년 11월 이후 1997년 4월 말까지 외부로부터 21만t의 곡물을 도입했고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가 6월말까지 곡물 33만6천여톤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있다. 또 최근 한국이 옥수수 5만t, 유럽연합(EU)이 곡물 15만5천톤을 지원키로 발표한 데다가<sup>88)</sup> 남북적십자대표 北京접촉에서 韓赤이 곡물 5만톤을 지원키로 합의한 것 등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한국 및 주변국이 지원하는 식량을 북한이 軍用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은 한·미가 너무 민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의회 조사국에 의하면, 북한이 매년 식량의 20%를 군량미로 사용함으로써 식량위기를 초래하였고 예비역을 포함한 군사요원 2백만 명은 일반 국민보다 7배의 식량을 배급받았다고 분석하였다. 북한은 지난 95, 96년의 흉수로 약 189만톤과 89만톤이 각각 감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실제로는

86) 駐베를린 북한이력대표부의 이상유 정무담당 참사관의 노이에스 도이칠란트紙와의 인터뷰, 「연합통신」, 1997. 5. 27. 그는 모든 주민들이 배급소에 등록돼 있으며 가정마다 가족 숫자에 따라 식량을 배급받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위기일 뿐 정치체제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밝혔다.

87) 권오기, 民主平統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상에서의 발언, 1997. 5. 23.

88) "Strategic Largess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5, 1997, p. 21.

60만톤 정도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89)</sup>

중국은 한·미 양국의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국간 불신이 뿌리 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은<sup>90)</sup> 한국의 정책이 남북간 불신을 감소시키는 데 공헌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정치적 협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남북한 정치협상으로 인해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 완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3만7천명의 주한 미군, 주일 미군, 미7함대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 미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주한 미군사력 강화, 한·미 연합작전, 미군사력의 한반도 파견 등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보다는 북한을 더욱 자극하여 예기치 못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완화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sup>91)</sup>

중국은 남북한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안에서로 합의한 경우, 이를 가장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어느 일방이 무력적 방법에 의해 한반도 체제가 구축될 경우, 이를 가장 부정적이며 자기 주장적(assertive)으로 반대할 것이다. 중국이 무력적 요소를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에 의해서이든지 혹은 한·미에 의해서이든지 무력에 의한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구축될 경우, 주변 강국들의 군사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이로 인해 이들 국가들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미국의

89)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 식량부족: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産經新聞』, 1997. 5. 28. 재인용.

90) “Beijing Radio Views Naval Clash in Yellow Sea,” *FBIS-CHI-1999-0617*.

91) China Radio International(Beijing), “On the US Dispatching Naval Ships and Fighters to the ROK Territorial Waters,” *FBIS-CHI-1999-0619*.

대북 군사력 개입에 의한 한반도 현상이 급속히 가일층 파괴되고 이와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강화되면 기존의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군부가 미국을 중국 안보의 주적으로, 그리고 미·일 방위 체제하에 있는 일본을 부상하는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북한 전역이 미국의 안보체제하에 직접 예속케 되면 미군이 북한 지역을 대중국 군사적 위협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향후 10년-20년간은 미군사력이 중국 군사력 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sup>92)</sup> 한반도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력충돌, 즉 전쟁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대만문제와는 달리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항을 자제할 것이다.<sup>93)</sup> 중국은 다만 외세의 무력개입이 없는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만을 적극 지지할 뿐이다.

92) 미국은 중국의 동북아 군사태세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 못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7년 5월 조셉 프뤼어 미태평양 군사령관은 “현재의 중국 군사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과 최근의 중국 군사력 증강 역시 그리 우려할 만한 수 것이 아니며 미국은 중국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은 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하겠지만 보다 막강한 전력을 갖추기까지는 15-2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프뤼어 사령관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27대의 제트 전투기와 항공모함 등을 구입키로 한 것 역시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러시아제 무기에 익숙해 있으며 중국이 항공모함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통신』, 1997. 5. 21. 다시 말하면,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군사태세는 한·미, 미·일 군사력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93) Hideshi Takesada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 Initiatives and Issue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p. 12.

## 라. 한·중 관계

중국은 이미 한·중 양국간 기본적인 이익과 가치 면에서 갈등이 없다고 표명하여 양국관계 발전 가능성을 크게 예상한 적이 있었다.<sup>94)</sup>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신이 반대하는 미국 주도의 TMD계획에 한국이 불참을 표명한 것은 한·중 양국이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선린우호' 관계에서 1998년 양국이 제창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는 안보협력 차원의 좋은 사례로 판단하고 있어,<sup>95)</sup> 향후 한·중간의 안보협력의 확대와 공동 보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이 미·일 안보 체제하에 있어 진정한 안보 독립성을 확보치 못하고 있고 미국 역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구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자국과 한국이 북한과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중 안보협력 확대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sup>96)</sup> 이는 함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안보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날수록 한국이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체제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중국이 대북 안보이익을 대남 경제이익 보다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의도를 중요시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결

94) "Tang on China's Diplomacy Over the Past 20Years," *Beijing Review*, Vol. 41, No. 52, Dec. 28, 1998 - Jan 3, 1999.

95) Xiaoxiong Yi, "The Impact of Beijing's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on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The Korean associations of International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French Political Studies*, 1999. 6. 9-10, p. 6.

96) 譚取榮, "關於消除朝鮮半島冷戰結構問題," 통일연구원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서울 워크샵 논문, 1999. 10. 25, p. 9.

정한다할 지라도 북한을 무시한 채, 한국의 입장을 동조한 평화체제 구축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중·미 갈등 고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크게 지지한 경우, 대한국 안보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거나, 북한을 유도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안보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고 자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안보 독립성을 인정하더라도 한·미·일의 대중국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만을 수용할 것이다.

## IV. 한반도 평화과정: 대중 협력 유도 방안

### 1. 기본 전략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안,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이행 여부, 한·미의 북입장 점진적 수용 의도 등을 확인한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해:

첫째,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법적인 전환보다는 사실적, 현실적 전환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주지시킨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일괄적인 제안보다는 단계적 해결 가능한 제안과 접근을 중시한다. 현상유지를 중시하는 평화체제 구축안을 제시한다. 셋째, 남북한 군축 합의보다는 정치적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둔다. 넷째, 한국의 통일후 입장은 가급적 언급을 회피한다. 다섯째,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보다는 대중 안보협력 확대에 더욱 치중한다. 여섯째, 미국이 가교 역할을 하지 않는 제안이나 혹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제안을 한다. 일곱째, 한·중 고위급 안보협의회를 창설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

### 2. 사안별 정책 제안

#### 가. 한·미 양국의 대중 관계 강화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미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미간 갈등 사안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입장을 단독으로 지지하지 않는 전



력이 필요하다.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대미 외교 보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대중 외교가 필요하다.

중·미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에서도 중국을 배제한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 나. 4자회담: 중국과의 사전 협의

기본적으로 중국은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4자회담의 의제에 관해 중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과 단독 협상을 수용한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북간 회담이 4자회담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4자회담의 성과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중국과의 사전에 단독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다자적 협의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6자회담 거론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건 합의에 대한 4자합의를 끌어내기 보다는 남북간 협의할 안건은 남북한이 먼저한 후 미국과 중국에 동의를 구하고, 미·북간 합의한 사안은 미·북 합의 후 한국과 중국이 동의하는 사안 별 당사자 원칙을 운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의 대중 및 대미,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의혹 등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중국과 협의시 기한 설정 필요

한국이 제안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은 북한의 수용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수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권고를 십분 활용하여 협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1999년 북한 장거리 미사일발사 기도에 대한 한·미·일의 대북 공동 시한설정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케하고 중국의 대북 미사일 발사를 억제케 하는 입장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실현될 경우, 자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물론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는 점을 크게 고려하였던 것이다. 대북 및 대중 기한 설정은 미국의 대중 협상시 효력을 발생한 것과 같이<sup>97)</sup> 한·미·일 삼국에게 결국은 이득이 되는 외교적 성과라 할 것이다.

### 라. 미·북 관계 개선 지지

미·북 관계 개선으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갖는 비중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미·북 관계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가일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중 안보관계 확대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과 평화과정에 대한 협상에 적극 임할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미·북 관계 수립시 남·북 평화협정 체결 시안을 명기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한·미 양국이 이행한다는 문안을 명기한다.

---

97) Robert S. Ross, *Negotiating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9-1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 257.

### 마. 정전위 위상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필요

북한의 정전위 기능 훼손 기도로 정전위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 철수에 따른 중국측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DMZ에 배치되고 있는 남북한 군사력을 50-100km뒤로 후퇴하고 쌍방간에 군사력 배치 한계지역(Limited Deployment Zone, LDZ)의 설정을 북한에 제안하고 중국의 정전위 대표단의 감시를 요청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를 지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은 한·중 불가침 협정이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미·북 외교관계가 수립될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불가침조약 혹은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중·북간 동맹관계를 약화 또는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맺은 불가침 선언에 따른 중·북간 우호조약의 자동군사원조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중국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

### 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중국이 미·북간 평화협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중국 측에 협조를 구한다. 중국은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간 협정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점이 활용된다. 중국은 다자간 또는 국제적 보장을 받는 평화체제 구축안은 중국의 기존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간 평화협정에 의한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안을 가장 선호할 것이다.

남북한 신뢰구축은 군사적 차원에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북간 정치관계 개선에 우선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진지한 협상이 추진되어야 하며 긴장완화는 남북 정

치관계 개선으로 가능할 것이다. 특히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군사훈련의 규모를 한정짓고, 자신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감소키 위한 군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전진 배치된 군대를 후방으로 두는 합의를 도출한다.

## V. 결 론

중국은 미국의 전략이 대중 패권확보에 있음을 경계하고 있어 미국과의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 바탕 하에서 한반도 평화가 점진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원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대북 경제지원과 대남 안보 관계 확대를 시도하고 현상유지를 통한 점진적인 정치적 타협과 남북한 상호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나,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한 대북 군사동맹 강화는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미 안보동맹 기본 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의 냉전구조 해체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중국의 입지에 부정적 파장이 미치는 상황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자국의 군사정전위 대표단을 소환함에 따라 정전회담의 부실화를 초래하였으며, 정전협정 관련 논의와 협상을 4자회담의 장으로 이전시켜 중국의 위상이 제고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은 4자회담에서의 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회담에 찬성함으로써 한국측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 주도로 4자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 정치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남북간 군비축소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북한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현 정전협정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남

북한간 합의에 의해 해결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둘째, 미·북 관계개선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발전되어야 하며, 셋째,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넷째, 한반도 안정 즉 현상상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한 평화체제 구축 안만을 지지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이헌경,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전성훈, 「한반도 군비통제방안 연구: 유럽 군비통제조약의 시사점과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美의회조사국 보고서, “북한 식량부족: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1997. 5. 28.
- 통일원, “97년 1/4분기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1997. 5.
- 통일부, 「북한동향」, 390호, 1998. 7. 4 -10.
- 통일부, 「계간 북한동향」, 1993. 3.
- 허문영,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방안,” 「21세기 남북관계 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 기념 심포지엄, 1999. 12. 7.
- 홍용표,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China Ministry of Foreign Trade & Economic Cooperation, Statistics Data, 1996-1998
- [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http://www.mofetec.gov.cn/official/html/statistic-data/e98-01-122)
- Janes Defense*, 1997. 5. 28.
- Ross, Robert S, *Negotiating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1969-198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 US General Accounting Office, *Letter Report*, 1996. 10. 1.

## 2. 논문

- 권오기, 民主平統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상에서의 발언, 1997. 5. 23.
- 김시중, 「한·중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 서울: 동아시아연구회 - 중국, 평화군축협회 발표 논문, 1996. 10.
- 리차드 솔로몬 미국 평화연구소 소장의 미하원 국제관계위 동아태소 위 청문에서의 입장, 1999. 2. 10.
- “북한군의 미사일 개발 실태,” 「북한」, 1996년 11월호.
- 牛強(중국인민평화 및 군축 협회 부서기장), “동북아시아 지역 안전 정세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동아시아연구회-중국인민평화 및 군축협회 서울 워크샵, 1999. 9. 6.
- 謙取榮, “關於消除朝鮮半島冷戰結構問題,” 통일연구원 -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서울 워크샵 논문, 1999. 10. 25.
- 소치형,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우리의 대응책,”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표 논문, 1999. 11. 26.
- 유석렬, “남북한 군비통제의 배경, 특징, 전략,” 신정현 외 공저,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실제」.
- 이춘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한국의 안보,” 1999. 3. 20.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 이홍영, “통일의 국제여건과 한국의 선택,” 「남북협력과 국가안보」, 건국50의 한국정치: 도전과 선택, 남북관계 학술회의, 1998. 11. 14. 한국정치학회.
- 전성훈, “한반도의 핵문제와 군비통제: 한반도 군비통제의 여건변화를 중심으로”, 민족통일연구원, 「탈냉전기의 한반도의 전쟁과



- 평화문제」, 1996. 9. 13.
- 황병무,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주변 4각의 대외 전략기조와 한반도」, 1996. 11.
- Chu, Shulong. "China and US-Korean Alliance,"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 10. 28. - 10. 29.
- Huang, Renwei. "Tentative Study of US Strategic Choice in the Asian-Pacific Region," *Shijiejingji yanju*(World Economy Study), No. 1, 1994.
- Kihl, Young Whan. "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s Security Problem,"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International seminar, Korean-American Studies Association, October 15-17, 1999.
- Kim, Hyung-Kook. "U.S.-North Korea Negotiations: A perspective from Washington,"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 Niksich Larry A.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greed Framework's Fading Prospects and a Look at Alternative Policies," 「North Korean Scenarios and EU Responses」, Conflict Prevention Network of the European Union, 1998. 10. 13.
- Park, Tong Whan. "North Korea and the Surrounding Power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발표 논문. 1999. 11. 26.

- Pendley, William T. "North Korean Challenge: Short and Long Term," p. 4. The Council on U.S. Korean Security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Washington, DC., 1999. 10. 29.
- Perry, William J.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Unclassified Report by Dr. William J. Perry, U. 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 C., 1999. 10. 12.
- Sigal, Leon V. "Beyond the Agreed Framework to a Missile Dea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 Takesada, Hideshi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Japan).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 Initiatives and Issue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 Wederman, Andrew. "Prospects for a Sino-American Transition War," Kwang Il Baek, ed., *Comprehensive Security and Multilateralism in Post-Cold War East Asia*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Zhao, Quansheng. "The Chinese Position on the Korea Four-Party Talks,"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9. 10. 15.
- Zhou, Xingbao. "Peace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 of China," 통일원 정세분석실, 1996. 5.

Yi, Xiaxiang. "The Impact of Beijing's Changing Strategic Perceptions on the China-South Korea Relations," p. 6. The Korean Associations of International Studies-The Korean Association of French Political Studies, 1999. 6.

### 3. FBIS 자료

*FBIS-CHI-97-177*, 26 June 1977.

*FBIS-CHI-97-191*, 10 July 1977.

*FBIS-CHI-97-209*, 28 July 1977.

*FBIS-CHI-98-103*, 13 April 1998.

*FBIS-CHI-98-021*, 21 June 1998.

"China: Xinhua Cites Kim Tae-chung on Results of PRC Visit,"  
*FBIS-CHI-98-317*, 13 Nov 1998.

"China: PRC Outlines 5 Principles To Reduce Tension in Koreas,"  
*FBIS-CHI-99-022*.

*FBIS-CHI-1999-0601*, 北京(Beijing), 「世界知識」, 11號, 1999. 6. 1.

"Further on Jiang Zemin Meeting Kim Yong-nam," *FBIS-CHI-1999-0608*.

"Hongkong Standard," "Jiang Zemin Reportedly Rejects Pact With India, Russia," *FBIS-CHI-1999-0610*.

"Beijing Radio Views Naval Clash in Yellow Sea," *FBIS-CHI-1999-0617*.

China Radio International(Beijing), "On the US Dispatching Naval Ships and Fighters to the ROK Territorial Waters,"  
*FBIS-CHI-1999-0619*.

*FBIS-EAS-1999-0623*.

- FBIS-EAS-1999-0629.*
- Li, Changjiu. "Boost All-round National Strength, Preserve World Peace", *FBIS-CHI-1999-0630.*
- Liu, Jiangyong. "Three Major Factors in East Asian Security," *Shijie Zhishi, Beijing*, No 17. 1999. 9. 01, *FBIS-CHI-1999-0928.*
- The Korea Times(Internet version), "Prospects for PRC Foreign Minister's North Korea Visit Viewed," *FBIS-EAS-1999-1005.*
- Zhao, Jiaming. "Favorable Turn Has Occurred in DPRK-US Relations," *FBIS-CHI-1999-1027.*
- "DPRK Ministry Marks Anniversary of PRC Joining War," *FBIS-CHI-1999-1102.*
- "France's Chirac Warns Risk of Bipolar US-China Tension," *FBIS-WEU-1999-1104.*
- "Kartman Interviewed on DPRK," *FBIS-EAS-1999-1103.*
- "Beijing Radio Views DPRK-US Talks in Berlin," *FBIS-CHI-1999-1115.*

#### 4. 해외 신문

- "North Korea's Nukes," *Washington Times*, editorial, 1996. 11. 8
- "Strategic Largess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5, 1997.
- Gertz, Bill. "Chinese Companies Sent Missile Parts to N. Korea,";US Department of Defense's Early Bird news service for July 20. *Washington Times*, 07/20/99.
- Gertz, Bill. "Technology transfers a concern, U.S. says,"

- Washington Times*, 07/21/99. US Department of Defense's  
Early Bird news service for July 21.  
*China Daily*, "Cox report lacks basic knowledge," 1999. 7. 16.  
"Tang on China's Diplomacy Over the Past 20Years," *Beijing  
Review*, Vol. 41, No. 52, Dec. 28, 1998- Jan 3, 1999.

## 5. 외신

- 북한의교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방송」, 1996. 2. 22.  
김대중 대통령의 1999. 5. 5 CNN 인터뷰.  
「조선중앙통신」, 1998. 6. 27. 「군축 및 평화연구소, 북한」, 대변인 성명;

## 6. 기타

- 「동아일보」  
「世界日報」  
「人民日報」  
「朝鮮日報」  
「中央日報」  
「연합통신」  
「産經新聞」  
「解放軍報」

Beijing Review

Far Eastern Economic Review

Washington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Korea Herald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저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저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저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저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정영태	저	6,000원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김국신	저	4,000원
96-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여인곤·김영춘·신상진의 공저		10,000원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안 연구	오승렬	저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저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저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저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저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저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저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김영운·이우영	공저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저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저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저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저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정영태·오승렬외	공저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저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저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이현경	저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저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저	5,500원
96-29	한·중 안보협력방안 연구	최춘흙	저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저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저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저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저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저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배정호·신상진·조한범	공저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김수암	공저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저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저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저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저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저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저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저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저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저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저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저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저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저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저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저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헌경	저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저	5,500원
97-26	북한의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허문영	저	7,0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김성철	공저	6,500원
98-04	남북한이산가족 재결합시 문제점과 대책	임순희	저	4,000원
98-05	북한 외자유치 법령의 문제점	제성호	저	6,500원
98-06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이교덕	저	4,500원
98-08	경수로사업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홍관희	저	4,000원
98-09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방향	박종철	저	6,000원
98-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신상진	저	4,000원
98-11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임강택	저	7,500원
98-12	한국의 대미 통일의교전략	박영호	저	5,500원
98-13	통일독일의 군통합 사례연구	손기웅	저	5,500원
98-14	한반도 문제를 위요한 미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과 갈등	옥태환	저	4,500원
98-15	NGOs를 통한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조한범	저	4,000원
98-16	남북한 통신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김규륜	저	3,500원
98-17	분단국 경제교류·협력 비교연구	황병덕	저	6,000원

98-18	북한의 해운산업 현황과 해운분야 남북한 협력 방안	김영운	저	6,000원
98-19	중·대만 비정치 분야 교류·협력 실태에 관한 연구	최춘흠	저	3,000원
98-20	조총련계 기업의 대북투자 실태	배정호	저	4,000원
98-21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 연구: 북·일관계정상화와 남북한관계	김영춘	저	3,500원
98-22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재고전략: 점진적·포괄적 구상	진성훈	저	7,500원
98-23	미국의 4자회담 전략과 한국의 대응책	이헌경	저	5,000원
99-01	미귀환 국군포로문제 해결방안	제성호	저	5,000원
99-02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이금순	저	5,000원
99-03	한반도의 비핵화실현과 남북한·일본 3국비핵지대창설	진성훈	저	6,000원
99-04	탈냉전기 일본의 국내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배정호	저	6,500원
99-05	남북 경제교류·협력 발전방안 연구: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대책	김규륜	저	5,500원
99-06	북한의 인사행정	최진욱	저	4,500원
99-07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동독 지역 적용에 관한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99-08	김정일의 퍼스낼리티·카리스마·통치스타일	김성철	저	5,000원
99-09	북한경제의 변화와 인센티브구조: 비공식부문의 확산에 따른 개혁 전망	오승렬	저	5,500원
99-10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경제부문 중심	최수영	저	5,000원
99-11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이우영	저	5,000원

99-12	북한의 지역자립체제	김병로	저	7,000원
99-13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방향	조한범	저	4,500원
99-14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 관계: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김국신	저	4,000원
99-15	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재진	저	5,000원
99-16	전환기의 대북정책: 포용과 억지의 병행전략	홍관희	저	4,000원
99-17	4자회담의 추진전략: 「분과위」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박영호·박종철	공저	7,000원
99-18	한국사회 냉전문화 극복방안 연구	조민	저	7,000원
99-1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과제와 추진 방안	박영규·이교덕	공저	5,500원
99-20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홍용표	저	4,000원
99-2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 실태 평가: 사상·정치·군사분야를 중심으로	전현준	저	5,000원
99-22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최춘흠	저	4,000원
<b>■ 북한인권백서</b>				
북한인권백서 1996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육태환·전현준·제성호의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송정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송정호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i>	최의철·송정호 공저	\$11.95
북한인권백서 1999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7,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9</i>	최의철·서재진·제성호의 공저	\$9.90
북한인권백서 2000	제성호·최의철·서재진의 공저	7,000원
<b>■ 연례정세보고서</b>		
96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6~1997		6,000원
97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7~1998		5,000원
98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8~1999		5,000원
99 통일환경과 남북한 관계: 1999~2000		6,500원
<b>■ 학술회의 총서</b>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탈냉전기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남북한관계 현황 및 '97년 정세 전망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500원
98-06 법적 관점에서 본 독일 통일	2,500원
99-01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5,500원
99-02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7,000원
99-03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III): 장기·포괄적 접근 전략	6,500원
99-04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방향	5,500원
99-05 탈북자의 보호 및 국내적응 개선방안	5,000원
<b>■ 통일문화시리즈</b>	
96-01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	10,000원
96-02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b>■ 논총</b>	
통일연구논총,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1998.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8권 1호 (1999)	7,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7 (1998)	8,000원
<b>■ Translation Series</b>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b>■ 기타</b>	
북한의 위기상황인식에 관한 연구	목정균 저 5,500원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ku.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 5) 본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발간물에 대한 초록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1997년 이후 발간물은 원문을 온라인 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담당자 1인만 가능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901-2559, 901-252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근 무 처				
	직 위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시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한반도 평화과정

인쇄/1999년 12월 28일

발행/1999년 12월 31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곽태환

편집인/북한정치군사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통일연구원, 199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ISBN 89-8479-000-1

4,000원